

공정 주도해야 진짜 강국... '인재육성·기술보호' 힘 실어야

K-반도체를 지켜라

〈中〉 황금알 낳는 거위 '소·부·장'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메모리 산업 지원 방안이 시급하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업계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다. 반도체 양산에 필수적인 기술 중 상당수를 미국과 일본 장비와 소재 업계에 의존하는 상황, 소부장을 키워야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지난해 반도체 장비 수입액 36조 삼전·SK 합산 영업이익 46조 규모 번 돈의 절반 이상 장비 사용 소모

7월 업계에 따르면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이 발간한 '최근 반도체 장비 교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지난해 반도체 장비 수입액이 250억달러(한화 약 35조원)이었다고 밝혔다. 무역 적자는 171억달러(약 24조원), 1996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삼성전자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33조7300억원이었다. SK하이닉스는 12조4100억원으로 합치면 46조원, 번 돈의 70% 이상을 다시 장비를 쓰는데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한국은 해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큰손'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애플라이드 머티리얼즈(21.7%), ASML



반도체 핵심공정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기업 세메스(좌), 테스(우) 세정장비



각사

(33.4%), 램리서치(26.8%), 도쿄일렉트론(20.4%) 등 주요 기업 매출에서 한국 비중은 중국에 이어 2위다. 중국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면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장비에서 나온다. 수나노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ASML EUV 장비를 필수로 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본사 엔지니어를 불러오지 못해 차질을 빚은 일도 적지 않았다. 새로운 공정 라인을 구축하는 데에도 장비 업체와 공동 작업이 불가피. 포토 등 일부 공정에서는 양산 업체보다 장비 업체 역할이 훨씬 중요하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국내 업체들이 반도체 장비를 수입해야만 하는 이유는 기술력 차이이다. 미국과 일본은 일찌감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 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탄탄한 기초과

학 육성 인프라까지 활용하면서 반도체 장비 부문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 ASML도 네덜란드 기업이지만 EUV 장비에도 미국 부품이 적지 않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소·부·장 기술 경쟁력 미미 대부분 구공정, 시험단계 머물러 '기초 튼튼해야 생태계 안정적'

일본이 반도체 완제품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를 포함해 반도체 업계가 일본과 협력하려는 이유도 탄탄한 기술력 덕분이다. 지난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250억달러(약 35조원) 흑자를 달성했다.

5대 반도체 장비 업체가 지난해 달성한 매출액은 816억달러(약 114조원)에 달한다. 전세계 반도체 장비 총 구매액(1027억달러)의 80% 수준이다.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지난해 매출 3조136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나 성장했다. 가트너에 따르면 전공정 부문에서도 글로벌 7위로 올라서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원익IPS와 테스 등 중견기업들도 꾸준히 R&D에 매진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

특히 지난 일본 수출 규제 이후부터는 민간 지원이 본격화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 주도로 국내 소부장 협력사 소재와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됐고, 정부 차원에서도 주요 소부장 부문을 선정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기술력 확보에 나섰다. SK그룹도 SK실트론과 SK머티리얼즈 등 계열사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 '수직 계열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공정에서는 경쟁력이 미미하다는 평가다. 업계에 따르면 세메스 등 국내 장비 업계 주력부

는 세정이나 웨이퍼 이송장비(OHT)에 그친다. 증착이나 에칭 등 장비도 개발하고 있지만, 선단 공정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워 대부분 구공정이나 시험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내 소부장 업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탓이라고 보고 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중은 비슷하지만, 규모가 작아 절대적으로는 크게 뒤쳐진다는 것. 이미 차이가 벌어진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인재 확보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국내 반도체 산업 특성상 핵심 인력들이 대부분 양산 부문으로 몰리는 만큼, 인재 풀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과학 육성 역시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기술 특성상 다양한 융복합 과학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글로벌 주요 장비 업체들이 이미 확보한 핵심 기술 특허를 기반으로 '카르텔'을 형성한 상태에서 이를 돌파하려면 전략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기술과 특허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양산은 결국 장비와 소재 기술을 토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핵심 공정까지 주도해야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꺾일 기미 없는 대출금리... 아차하면 9%대 폭탄 맞는다

기준금리 오르면 내년 9% 육박 전망 보금자리론 등 리스크 분산 고려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한국은행도 환율 방어 부담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처지에 놓였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7%를 넘긴 대출금리가 내년 9%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월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48~7.20%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의 KB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4.48~7.20%며,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연 5.59~6.79%,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주택담보대출은 연 6.16~6.76%, 우리은행의 우리WON 주택대출은 연 5.71~6.31%다. 지난해 말(3.71~5.07%)과 비교해 금리 상단이 2%포인트(p) 이상 올랐다.

◆기준금리 올라 대출금리 9% 눈앞

문제는 대출금리가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것.

지난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해 기준금리가 3.75~4.0%로 높아졌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3%대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가 시작된 7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직원이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다. 원·달러 환율 오름세에 따라 원유, 원자재 수입부담이 가중되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확대돼 대출금리가 오른다. 지난해 말 기준금리가 1%에서 3%로 2%p 인상하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p 이상 올랐다. 기준금리가 4%대를 넘어설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 후반을 넘어 9%대에 근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자들의 금리부

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금리 9%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리균등상환할 경우 첫 상환금은 243만3867원이다. 금리 7%에서 내는 199만5907원보다 41만7960원 더 내야한다.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주목

전문가들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거치기간을 고려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 이내이다. 1년 뒤에도 금리인상이 예상될 경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더라도 고정금리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 금리인하

가 예상된다면 변동금리를 택해야 한다. 고정금리를 택한 뒤 3년 이내에 변동금리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환계획이 없고, 대출을 계속이용해야 한다면 인플레이션 정점을 확인하고, 금리가 충분히 하락한 다음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연 4.0%의 고정금리로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주택가격 6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주택가격을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도 활용방안이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10~50년)까지 고정금리로 원리균등 분할상환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50년 기준 4.85%에서 4.55%로 0.3%p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했다. 신규보금자리론도 대출 실행분부터 해당 금리가 적용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면 '소비감소·고용위축...'서 계속

연구원, 정부 상황인식 부족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 필요'

우리 경제를 반겨왔던 수출마저 지난 달 5.7% 감소하며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적자를 봤다.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인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이다.

한경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현상을 들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내년을 기점으로 경기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성장 지표 자체는 경기 부진, 스태그플레이션을 운운할 수 있는 정도의 지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 둔화를 예고하는 경제 지표가 늘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는 연구기관들과 달리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경연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불황을 막으려면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과 함께 규제·노동 개혁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